

「2022-제1호(Vol. 19호)」

#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2. 1. 31.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li> <li>• 2020~2021년 강원경제, 그리고 2022년 전망과 대응</li> <li>• 2022년 10대 경제 키워드 -AFTER TIMES(코로나 이후의 미래)</li> <li>•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2022.1)</li> <li>• 코로나 위기 만 2년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li> </ul>	한국금융연구원 강원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2. 재정 (4~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BO 재정동향 &amp; 이슈(2021년 4분기)</li> <li>• 2021년 개정세법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li> <li>• 2022년 1월 재정동향 및 이슈</li> </ul>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3. 예산·재정 관련법령 (6~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li> <li>• 「지방세법」 일부개정</li> <li>• 「지방재정법」 일부개정</li> <li>•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li> <li>•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li> <li>•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li> </ul>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8~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li> <li>• 저탄소시대의 탄소가격제와 강원도</li> <li>• 포스트코로나시대 지방세·지방재정 ‘4080’ 개혁방안</li> <li>•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고령자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li> <li>•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국을 중심으로-</li> <li>• 2021년 교육여론조사 결과</li> </ul>	한국개발연구원 강원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교육개발원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1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경제정책방향</li> <li>• 소통과 참여를 통해 더욱 안심되는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li> <li>•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li> <li>• 2021년 지방재정 집행 468조원 역대 최대 규모</li> <li>•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li> </ul>	기획재정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1. 경제

출처

## ■ 2022년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4.1% 성장한 우리경제는 2022년에도 3.2% 성장하여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선진국의 강력한 통화·재정정책과 백신접종 확대로 수출이 늘어난 데다, 두 차례 추경과 초저금리 하에서 내수도 점차 회복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음
- 백신 접종 확대를 기반으로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조치 등 유동성 축소, 높아진 자산 가격과 부채규모에 따른 금융불균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거시경제 정책은 경제 회복 정도에 맞춰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점차 정상화하되 확대된 리스크 요인에도 유의해야 함. 단기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체제가 시작된 만큼 감염병 관련 정보제공 및 의료대응능력 강화, 손실보상체제 확충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정책을 추진해야 함

[바로가기](#)

## ■ 2020~2021년 강원경제, 그리고 2022년 전망과 대응

강원연구원

### < 2021년 강원지역경제 동향 >

- 전체적으로 2021년도는 소비확대와 서비스업 생산, 수출이 강원경제를 견인하였고 제조업 생산,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2020년 수준을 유지. 2021년은 2020년 -2.0% 성장률의 기저효과와 소비확대, 서비스업 생산 증가, 높은 수출 증가 등으로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임

### < 2022년 전망과 전략방향 >

- 강원도 경제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올 한해도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 강원도 경제는 확대와 감소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의 미래 자동차 전환에 따른 설비투자, 상생형 일자리 기업의 투자 확대, 시멘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친환경 시설투자 확대 등이 예상됨. 동해북부선착공 등 강원도의 SOC 예산 확대('21년 7.8조원→'22년 8.4조원)로 건설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의료용 진단기기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의 해외수요 지속,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및 대만 해상풍력 단지 사업의 추가 수주 등으로 전선 수출(LS전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등 대규모 전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최소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이를 위해 강원도와 18개 시군 지방정부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강원도 데이터 댐 구축, 강원 데이터 가치창출 지원센터 조성, 강원 데이터 플랫폼 특구 추진 등 디지털 혁신 대전환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추진 필요

[바로가기](#)

# 1. 경제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 ■ 2022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 AFTER TIMES(코로나 이후의 미래)

- (2022년 한국 경제 트렌드의 10대 키워드 : AFTER TIMES)

구 분		세부 내용
[A]	Asymmetric recovery(비대칭 회복)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개선
[F]	Forward guidance(사전적 정책방향)	미 연준의 제로금리 탈출
[T]	Twin deficit(쌍둥이 적자)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E]	Endgame(종반전)	팬데믹 불확실성 속 정상화 단계 진입
[R]	Rhino(코뿔소)	차이나 리스크의 심화
[T]	Taylor's rule(테일러 준칙)	한국은행의 출구전략 지속
[I]	Inertia effect(관성효과)	보복 소비 기대와 회복 지연 우려 병존
[M]	Mild recession(연착륙)	경기 상승세의 둔화
[E]	Economic misery index(경제고통지수)	서민 체감 경기의 부진
[S]	Secular stagnation(장기침체)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

- (주요내용) 2022년에도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팬데믹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코로나 위기 이전의 정상 성장 추세로의 안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연초 오미크론 발 글로벌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 확대, 방역 기술의 발전, 경제의 내성 강화 등의 요인으로 COVID-19과의 전쟁에서 미약하나마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
- (시사점과 대응방안)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는 관성효과를 막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투자 활성화 유인 노력이 필요하며 「투자확대 →고용 창출」의 파급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임

2022년 경제키워드	대응 방안
Asymmetric recovery	수출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해 시장 외연 확대와 시장별 차별적인 접근 전략 필요
Forward guidance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투기자본 모니터링 강화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Twin deficit	신흥시장 발 위기 가능성을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과 비상계획 실행 능력 점검
Endgame	연초 글로벌 대유행으로 인한 일시적 GVC 교란 가능성에 대비
Rhino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 내 민·관 소통 채널 강화와 대응 공조 체계 구축
Taylor's rule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Inertia effect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간 고용창출력 복원으로 노동시장의 질적 회복 도모
Mild recession	상반기 경기 회복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을 제고 필요
Economic misery index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완화 등의 선제적 서민 물가 안정 노력 요구
Secular stagnation	노동력 활용 극대화, 시장 규제 완화, 기술 혁신 강화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바로가기](#)

# 1. 경제

출처

## ■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2022.1)

한국은행

- (최근 국내경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 수출은 글로벌 재화수요 증가, 견조한 IT경기 등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고 있음. 소비는 지난해 10~11월중 반등하였다가 최근 들어 감염병 재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의 영향으로 회복세 감소
- (경제성장률) 지난 11월에 전망치와 동일하게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① 감염병 상황 조기 개선, 정부지원책 확대, 글로벌 반도체경기 개선 등은 호재이나 향후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②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 심화, 글로벌 공급차질 회복 지연, 중국경제 성장세의 빠른 둔화 등은 불안요소 임 ③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회복, 공급병목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④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

[바로가기](#)

## ■ 코로나 위기 만 2년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개요)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 확인 이후 만 2년의 시점에서 경제 및 산업 구조에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
- (경제구조 변화의 특징)
  - 교역의존도가 코로나 위기 이전 보다 크게 상승
  -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크게 하락, 순수출(수출-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후 크게 상승
  - 민간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크게 하락한 반면, 정부수요의 GDP 대비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상승
-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나, ICT 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 보다 크게 높아짐. 수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를 전후로 ICT 산업이 전체 수출 경기를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반면, 비ICT 특히, 기계와 자동차가 코로나 위기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함. 또한 코로나 위기를 전후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변화가 없으나, 서비스업 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문화·기타 산업 등은 크게 위축된 반면, 금융·부동산, 정보통신업 등은 오히려 시장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이후 경제 및 산업 구조 급변 대응 방안 및 시사점)
  - ① 경기회복의 핵심 동력인 수출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공급망 교란에 적극 대응 ② 정부소비지출보다 민간소비를 활성화할 간접적인 내수 진작책이 필요 ③ 코로나 위기에 기업 투자가 확대될 적극적인 시장 규제 완화에 노력 ④ ICT 산업의 양적 성장이 경제·산업 구조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기술 확산과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모색

[바로가기](#)

## 2. 재정

출처

### ■ NABO 재정동향 & 이슈(2021년 4분기)

- (주요 재정지표) 2021년 9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각각 86.0%, 78.0%이며, 통합재정수지(29.6조원 적자)는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50.8조원 개선하였으며,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국고채권 상환으로 0.6조원 감소한 926.6조원으로 전년 결산기준 대비 107.4조원 증가함
- (주요 재정동향) 2021년 4분기 주요 재정동향은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와 더불어, 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수립 발표, ②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③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 ④ 2022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결정 ⑤2022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발표, ⑥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 발표, ⑦ 인구 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 발표, ⑧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발표, ⑨ 미국 인프라 투자법의 주요내용 ⑩ OECD 국가의 교육재정 지표, ⑪ OECD 주요국 건설 투자동향 비교 등 11가지를 선정하여 재정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함
- (주요 재정이슈) 2021년 4분기의 주요 재정이슈로는 정부의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 발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확정하였는데 이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월)에서 제시된 탄소중립에 따른 사회적 구조전환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장기 에너지계획 등 후속계획,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방향 등 부문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주요 내용을 소개함.

국회예산정책처

[바로가기](#)

### ■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 (개관) 국회 세법심사는 2021년 12월 2일과 9일 두 차례 본회의를 거쳐 총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함. 본 보고서는 202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22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정세법 주요내용 및 심사 쟁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세기본법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및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유예(1년)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물납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사항 등이 있으며 ▶개별소비세법 과세물품에 대한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심사 쟁점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됨
- (향후 논의과제) 국가전략기술 등 신산업·국가성장동력 관련 세제지원 항목과 2050탄소 중립 선언 및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환경 이슈 관련 탄소세 도입 세제 개편안은 추후 논의해야 할 과제에 해당

국회예산정책처

[바로가기](#)

## 2. 재정

출처

### ■ 2022년 1월 재정동향 및 이슈

기획재정부

#### - (재정운용동향)

- ① 총수입: 국세·세외·기금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유지되었고(523.9조원), 주로 경기 회복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
- ② 총지출: 경기회복 견인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전년 동기대비 45.2조원 증가
- ③ 재정수지 : 국세·기금수입 등 총수입 개선으로 11월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0.9조원 개선( $\Delta 63.3 \rightarrow \Delta 22.4$ 조원)
- ④ 국가채무: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월말 기준 180.5조원(국고채 잔액 843.7조원)

#### - (주요 재정 이슈)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플랫폼 노동 등 근로형태 다양화, 기대수명 증가로 평생직장 개념이 약화되고, 평생직업 능력개발의 중요성 증대되어 프로그램 내용 및 훈련·교육 전달방식의 일부 보완 필요

**[주요국(韓·美·英·中)의 R&D 재정투자동향]** 미·중 기술패권 경쟁 격화, AI·감염병·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 R&D 재정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산업·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 중장기 R&D 투자전략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시 주요국 투자동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반영 필요

\* 탄소중립, 양자기술, 뇌연구, 미래차, 국제협력, 우주, 기초연구, 디지털기술 등 포함

**[급변하는 가족형태에 대응한 보편적 가족서비스 추진방향]**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혼인 및 혈연 중심으로 유지되어온 현행법과 제도는 한계가 있어, 가족 형태 다양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 증진 등을 반영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1~'25)이 수립됨에 따라 1인 가구·한부모·청소년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

[바로가기](#)

###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개정 '21.12.28. 시행 '22.1.1.)

법제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 「지방세법」 일부개정(개정 '21.12.28. 시행 '22.1.1.)

법제처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개정 '21.12.28. 시행 '22.1.1.)

법제처

-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 경마, 경륜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 역시 시·도세로서 그 중 일부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개정 '21.12.28. 시행 '22.1.1.)

법제처

-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친환경·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개정 '21.12.28. 시행 '22.1.1.)

법제처

- 납부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비용을 줄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범위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에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송달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개정 '21.12.7. 시행 '22.1.1.)

법제처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 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에 활용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한국개발연구원

- (개요)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전반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전체 국가재정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하고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 추이를 반영하여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 논의 필요
- (주요국가와의 비교) ① 미국 : 교육자치 단위인 학교구는 교육행정 자율성의 대가로 과세권한을 갖고 재원조달의 책무성 요구 ② 일본 : 중앙정부 부담은 교원 인건비 1/3과 약간의 시설정비 비용에 한정되어 있음 ③ 우리나라 :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현재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 축소 사회의 합리적 자원배분에 부적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필요성 )
  - ① 학령인구 감소 :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2060년 1인당 교부금액은 2020년의 5.5배로 급증하며 소득과 물가상승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② 교육분야 내 재정간막이 :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고등교육 지원에 활용되지 못하므로, 대학이상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하위권으로 기형적 자원배분의 결과 초래
  - ③ 교육외 다른 분야의 재정수요 확대 : 국민들의 인식에 있어서 교육투자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노후, 건강 및 의료, 실업, 아동양육 등의 복지 재정수요 중요도가 증가
- (정책적 시사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재정교부금의 총량은 정상성장률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대하더라도, 확대범위는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및 국가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수준에서 확대되어야 함

[바로가기](#)

### ■ 저탄소시대의 탄소가격제와 강원도

강원연구원

- (논의 배경) 세계적으로 심화된 지구온난화는 단순 폭우,폭설을 넘어 지구생태계를 바꾸고 인류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이며 특히 이산화탄소가 91%를 차지하는데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료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탄소량을 저감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온난화를 관리하여야 하는 현 시대적 상황에 탄소가격제의 목적이 있음
- (논의 동향) 2021년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넷제로(net zero)를 발표하며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정부의 계획보다 10년 앞당긴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함. ①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 ②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의 논의가 대두
- (탄소세에 대한 대응방안) 강원도는 산간지역이 많고 고령화 인구 비중이 높아 저소득, 고연령층을 위한 노후화된 지역의 재생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므로, 탄소국경세로 타격을 받는 산업군을 파악하고 관련 기업의 필요한 정책적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조세의 역진성을 가진 탄소세인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지원 방안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

[바로가기](#)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코로나시대의 지방세·지방재정 '4080' 개혁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추진배경)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지방소멸 우려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의존적 지방세입구조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방소멸의 지역사회 위기 속에서 주민보호 등 삶의 질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방세비율 40%, 재정자주도 80% 목표로 지방세·재정 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재정분권 방안이 제시됨
- (4대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 ① 지방재정 자립-국세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정비,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담배소비세 확대
  - ② 지역균형발전-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강화, 지역균형발전기금 신설, 분석을 통한 재정형평화 재설계, 지방세 중과세제도 실효성 확보
  - ③ 공평과세 구현- 토지 용도별 과도한 세부담 격차 완화, 부동산 상속 증여 취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 불형평 해소, 전기수소차 확대에 따른 자동차세 재설계
  - ④ 지역경제활성화 조세수단 확보-지방소비세 재설계, 양도소득세 일부 이양으로 지역맞춤형 부동산세제 운영, 부동산 과표결정권 강화,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 (결어) 지방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일자리 창출, 노인 돌봄 등 주민 삶의 질 제고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지방재정 자립 기반 마련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 소멸 등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산 불평등,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대응 등 다변화사회 여건에 적합한 지방세제도 합리화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함

[바로가기](#)

###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고령자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 (개요 및 배경) 인구고령화는 생산 능력과 소비욕구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며 빈곤층을 형성하여 분배 정책의 주요 대상임. 현재의 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제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음. 고령자 소득 증가는 삶의 안정성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여 빈곤문제 해결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고령 계층에 대한 공적연금 증가는 소비성향이 낮아 소비확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 실증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분석 결과) ① 고령자 가계의 공적연금이 증가할 때 사적이전소득이 함께 증가하고 있고, 향후 공적연금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는 더욱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음
- ② 공적연금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소비의 가치분소득 탄력성과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고 연금 증가로 인한 가치분소득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연금 비수급가구의 동일한 소득 증가보다 더더욱 소비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됨. 즉 공적연금이 안정성이 높은 소비성향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사점) 공적연금이 고령자 가계의 소비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공적연금 소득이 비공적연금 소득에 비해 소비효과가 크다는 점이 고무적임. 이번 실증분석으로부터 고령자 가구의 공적연금이 커질수록 다른 소득에 비해 소비효과가 커질 것이 전망됨

[바로가기](#)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국을 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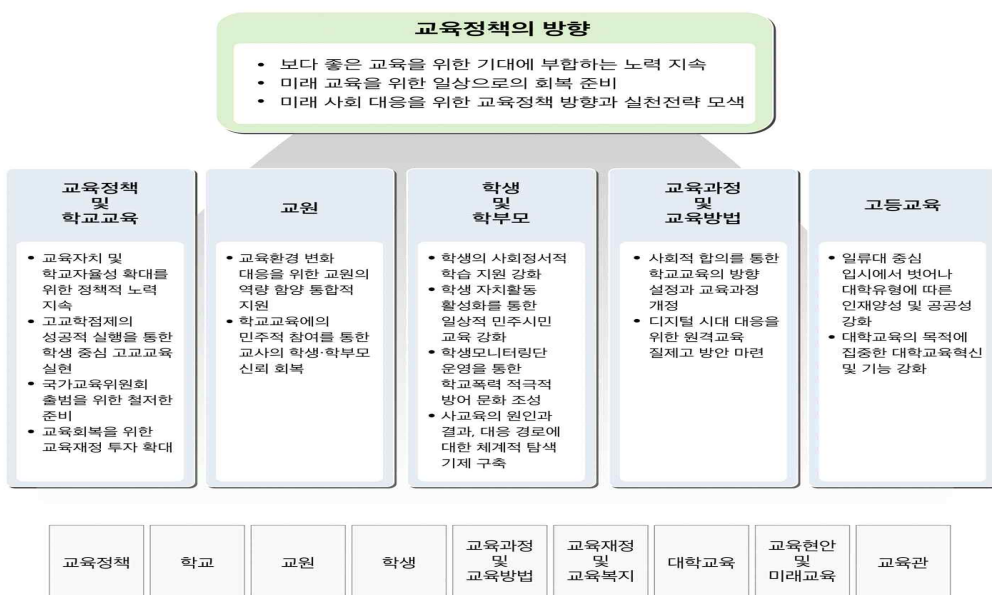
- (개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수준과 경제성장 경로에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OECD 국가들의 대응방향과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에 대한 참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 1990년대까지는 OECD 국가의 인구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국가별, 지역별로 인구구조 변화에서 차이를 보임.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국가는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국가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나 자동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국가별 노동생산성 하락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보임
- (시사점 및 대응방향) OECD 국가들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첫째,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해외 이주민(이민) 유입 적극 추진, 둘째,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생산 및 서비스의 자동화를 지속 추진, 셋째, 노동참여율 증대를 위해 가족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년 연장 등을 추진하여 왔음. 반면, 해외 이주민 유입은 사회적 갈등과 사회통합 비용이 발생하고, 생산·서비스 자동화는 부문간 지역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 2021년 교육여론조사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 (조사 목적) 2021년 교육여론조사(16차)는 새롭게 추진하거나 변화를 검토 중인 우리나라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 의견을 조사하여 교육정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음
-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바로가기](#)

## 5. 뉴스브리핑

출처

### ■ 2022년 경제정책방향

- 정부는 '21.12.20. 대통령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 2021년에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민생 등 완전한 경제회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집중 한 해로 우리 정부도 ①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 흐름을 지속하면서 ②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③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하면서 혁신 성과 가시화 등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강화하여 경제도약의 기반을 구축
- 2022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 일상 회복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대내외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국내외 경기 개선에 따른 그간의 고용·소득 증가, 심리 개선 등이 소비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 ■ 소통과 참여를 통해 더욱 안심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 발표

- '미래학교'사업은 2021년 702동(484교, 총사업비 3.5조원)을 선정·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국비 5,194억원, 지방비 1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518동을 선정·추진할 예정
  - \* 2021년~2025년까지 40년 이상 경과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리모델링)
- 사업 첫해인 2021년에는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선정 및 사전기획 등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소통 및 효율적 지원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2022년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다양한 사전기획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안내하고, 개정 교육과정을 포함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안전'을 핵심요소로 미래교육의 학교공간 조성 과 감염병 걱정이 없는 안심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계획임

교육부

[바로가기](#)

### ■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 -

- 정부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12.7조원 규모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21.1.23일)」, 1백만원 방역지원금 등 6.5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12.17, 31일)」 등을 마련·신속 집행 중에 있으며,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으로, 자영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월중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경제회복으로 예상보다 더 늘어난 '21년 초과세수(약10조원)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속히 환류하고자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포인트(one-point)에 한정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규모 14.0조원) 추진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 5. 뉴스브리핑

출처

## ■ 2021년 지방재정 집행 468조원 역대 최대 규모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22.1.3.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결과 2021년 지방재정의 89.3%를 집행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집행실적을 보였다고 밝힘.
- 243개 자치단체의 2021년 지방재정 최종 집행액 468조원은 2020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규모임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2년에도 지방재정이 지역 및 민생경제 회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목표 60%)이상을 강화하는 등 연초부터 선제적, 전략적, 확장적 집행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집행할 계획임

[바로가기](#)

## ■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지자체 26곳 선정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21.12.20. 전국 지자체에 대해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을 분석 진단하여 우수 자치단체 26개 기관을 선정·발표함.
- 2015년부터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고, 특히,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자체의 관심을 독려해나가기로 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규모가 약 30조원으로 전체 지방세입 규모의 30%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자체 스스로 체납을 줄이고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우수 지방자치단체 현황>

구분	광역	시	군	구
최우수	충청남도	경기수원시 전남여수시 경기양주시 강원동해시	충남예산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전북진안군	대구달서구 광주북구 대구서구 대구중구
우수	강원도	충북청주시 경기군포시 강원강릉시 강원태백시	전남고흥군 경남거창군 전남강진군 강원고성군	대구수성구 대구북구 인천계양구 광주동구

[바로가기](#)